KMI
해양수산 현안분석

2007-02

독도연구센터 : 유미림 책임연구원
mirim-u@kmi.re.kr, 2105-4954

최근 일본의 「독도」 관련 연구동향과 우리의 과제

2007. 2. 21

목 차

<요약>

Ⅰ. 일본의 '독도' 연구 관련 단체 1

Ⅱ.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중심의 연구와 활동 3

Ⅲ. 일본에서의 독도 문제 대응 점차 조직화·체계화 8

Ⅳ. 우리의 대응 과제 9

【부 록】 일본 정치인들의'독도'인식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이 자료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htttp://www.km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요 약 >

일본의 독도 연구,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중심으로 추진

□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영유권 분쟁은 일본이 2005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설립하여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게 됨으로써 분쟁이 가열되기 시작함

□ 일본의 독도 연구는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기에 '시마네현다케시마문제해결촉진협의회', '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시마네현민회의', '다케시마영토권확립현의회의원연맹' 등이 협력하여 활동을 하고 있음

'다케시마문제연구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및 홍보교육을 목적으로 함

□ 연구회의 최종목표는 첫째,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을 포함, 영토권 확립을 향한 노력을 하고, 둘째, 독도문제에 관한 홍보계몽운동 추진 및 정부내 독도문제 소관조직을 설치하며, 셋째, 각급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문제를 다루고 동시에 교재 개발을 목적으로 함

□ 연구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명은 현에서 배치된 독도 담당 행정인력이고 나머지는 연구에 종사하는 위원임

'다케시마문제연구회', 독도에 대한 영유권 논리개발 연구

□ 시마네현, 돗토리현, 오키지역의 사료 발굴 및 분석

○ 위원들이 조사, 연구해 온 현황을 연구회에서 비공개로 보고, 토론

□ 일본에게 유리한 고지도 발굴 및 이의 해석 노력

○ 지도연구를 통해 일본이 근세기 독도를 인지하고 관할하고 있었다는 사실 증명작업 수행

□ 한·일 양국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논점을 정리, 이에 대한 일본의 논리 개발

○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에 유리한 사실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함

일본에서의 독도문제 대응 점차 조직화・체계화

□ 시마네현 이외 돗토리현도 적극대응

○ 돗토리현에서도 독도 영토권 확립을 위한 의원연맹 발족(2006. 9)

□ 일본의 정당에서도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요구

○ 자민당 의원들은 내각부에 '다케시마문제대책실'의 설치, 내각부 설치법의 개정, '다케시마문제의 해결촉진'을 소관사항에 추가할 것 등을 요구

□ 전국 교사들이 학교에서 북방영토 교육을 충실히 하고자 만든 '북방영토문제교육자협회'에서 신학습지도 요령에

○ 북방영토와 함께 독도 문제, 조어도 문제를 다루는 것도 검토중임

우리나라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추진 필요

□ 국제재판 회부를 가정하여 빈틈없는 연구 축적 필요

○ 독도영유권에 대한 정확한 국제법적 지위와 상황파악을 통해서 국내외 여론의 왜곡과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우리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논리성과 객관성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 재구성, 논리개발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기반 구축

□ 독도종합정보관 설치 운영 필요

○ 독도박물관과는 별도로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독도종합정보관'을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일본에서 조례 제정과 '다케시마연구회' 설립의 가장 큰 효과가 국민 여론의 '계몽'과 '홍보'라고 자평

□ 독도관련 자료의 공유시스템 구축 시급

○ 기관마다 중복 수집을 배제하기 위해 각 기관 소장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 이를 위해 독도 자료실을 통합・운영하는 등 독도관련 자료 공유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과제임

Ⅰ. 일본의 '독도' 연구 관련 단체

'다케시마[1]의 날' 제정과 연구회 설립

□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영유권 분쟁은 일본이 2005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고, '다케시마문제연구회(竹島問題研究會)'를 설립하여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하게 됨으로써 가열되기 시작함

□ 일본의 독도연구는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기에 이전에 설립된 여러 단체 즉 '시마네현다케시마문제해결촉진협의회', '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시마네현민회의', '다케시마영토권확립현의회의원연맹' 등이 협력하여 각종 운동과 홍보를 하고 있음

일본의 독도 관련 단체

□ '시마네현 다케시마문제해결촉진협의회'는 1977년 3월 19일 시마네현 의회가 독도 영토권 확립 및 안전조업의 확보에 대한 결의를 통과시킨 후 4월 27일에 설립됨

○ 이 협의회는 1977년부터 1995년에 이르기까지 「돌아오라 섬과 바다, 다케시마」라는 독도 관련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일본 정부에 독도 영토권의 확립 및 조업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음

□ '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시마네현민회의'는 시마네현의 각계를 대표하는 단체에 의해 1987년 3월 11일 설립됨

○ 현 연합청년단, 현 연합부인회, 현 어업연맹, 현 수산진흥협회 등 40여 단체로 구성

○ 2003년 11월 15일에는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민·관·정이 함

1) 일본에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고 부르고 있음. 본고에서는 독도관련 일본의 단체 고유명사에 대해 '다케시마'를 그대로 기재하였음.

께하는 '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시마네현대회'를 대규모로 주최함으로써 그 활동성과를 일본 국내에 널리 알림

□ '다케시마영토권확립현의회의원연맹'은 2002년 시마네 현의회에서 설립한 단체로서 현의회의 초당파 의원 36명으로 구성됨

○ 2006년 10월 중순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수상이 이끄는 일본의 신내각에 독도의 영토권 확립을 진정하는 등 대(對)정부 창구로서의 역할을 함

○ '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시마네현민회의'와 함께 독도 영토권 조기 확립과 정부 내의 소관조직 설치 및 계몽활동을 요청하는 국회청원을 2006년 5월 31일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 제출함

□ '다케시마문제연구회'는 '다케시마의 날'로 하는 조례 제정이 계기가 되어 2005년 4월에 발족하게 된 단체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반박논리 계몽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됨.

○ 일본의 독도 관련 단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연구단체라 할 수 있음

○ 이 단체는 간헐적으로 행사활동을 해온 다른 단체와는 달리 시마네현의 재정지원을 받는 연구회라는 상설 조직을 통해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 연구회는 스미다 노부요시 시마네현 지사와 연구회의 좌장을 맡고 있는 시모조 마사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스미다 노부요시 지사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연구회를 설립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또한 일본의 대표적인 독도문제 연구자인 시모조 마사오 다쿠쇼쿠 대학 교수는 한국에서 16년간 체재하면서 독도문제를 연구하여, 한국 측의 논리를 가장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설립할 당시부터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음

○ 연구회는 2005년 6월부터 격월로 개최하여 2007년 1월 현재 11회 보고회를 마친 상태이며, 그 중간 성과물을 2006년 5월에 스미다 지사에게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였음. 연구회 활동의 주요 성과로는 한・일의 독도관련 논점정리, 관련자료 수집 및 목록 정리, 사료의 현지조사 등이 있음

Ⅱ.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중심의 연구와 활동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설립의 경위

□ 일본의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고 '다케시마문제연구회'를 설립하여 연구회가 독도영유권 반환을 위한 정책 브레인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있음

○ 시마네현은 그동안 일본 정부에 영토권 확립을 요청해왔으나 소기의 성과를 보기 어렵게 되자, 2005년 2월 22일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게 됨

□ 시마네현이 조례를 제정하면서까지 자체적으로 독도 문제에 몰두하게 된 배경에는 어업관계자의 위기감과 관련이 있음

○ 일본 어업관계자는 독도 문제가 미해결이기 때문에 독도 주변의 12해리 안에서의 안전 조업이 행해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보고 있음

○ 일본은 잠정수역에서 많은 한국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으므로 일본 어선의 조업에도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함

□ 또한 시마네현은 일본에서 재정 자립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므로 독도 문제를 부각시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 교부금을 많이 받으려는 정치적인 계산도 작용함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목적

□ 연구회의 최종목표는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국제사법재판소에서의 해결을 포함, 영토권 확립을 향한 외교 교섭을 시도

○ 둘째, 독도문제에 관한 홍보계몽운동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 안에 독도문제 소관조직을 설치

○ 셋째, 각급학교 교육과정에서 독도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교재의 개발을 목적으로 함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구성

□ '다케시마문제연구회'는 2년을 시한으로 설립되었으나, 이는 단지 예산상의 문제로 예산만 확보된다면 언제든지 연장할 수 있는 상태임

□ 연구회는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한 명만이 독도담당 스태프로 현에서 배치된 행정인력이고 나머지는 연구에 종사하는 위원임

○ 위원 가운데 시모조 좌장과 후쿠하라 유지(福原裕二) 시마네현립대학 조교수와 후나스기 리키노부(船杉力修) 시마네대학 법문학부 조교수가 가장 왕성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음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연구활동 상황

□ 시마네현, 돗토리현, 오키지역의 사료 발굴 및 분석

○ 원자료로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사실자료와 사료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독도관련 사료소장 개인들에게 자료 기증하도록 광범위한 노력

○ 위원들이 조사, 연구해 온 현황을 연구회에서 비공개로 보고 및 토론 (<표-1> 참조)

〈표-1〉 연구 및 조사자료 현황

담당 위원	연구주제 및 조사자료
우치다 후미에(內田文惠)	무라카미가(村上家) 소장「元祿 9年 丙子年 朝鮮舟着岸一卷之覺書」해독에 대하여
다니구치 히로시게(谷口博繁)	「鳥取藩政資料로 본 죽도문제」
후나스기 리키노부(船杉力修)	「繪圖・지도로 보는 죽도」
스기하라 다카시(杉原隆)	「일본・한국간의 표류의 역사와 죽도문제」
후쿠하라 유지(福原裕二)	「竹島/독도관계사료・자료목록」
후나스기 리키노부(船杉力修)	高見家「삼국통람여지노정전도」등
후나스기 리키노부(船杉力修)	藤間家「대일본해륙전도」
후나스기 리키노부(船杉力修)	藤間家「明治 9년 일본지지략」

□ 일본에게 유리한 고지도 발굴 및 이의 해석 노력

○ 16세기부터 20세기 독도 관련 지도 60점의 기재 변천조사 연구

○ 일본에게 유리한 오키전도(시마네현 오키도청, 1912년 간행), 동아여지도(육지측량부, 1909) 등의 자료 해석

○ 즉 지도연구를 통해 일본이 근세기 독도를 인지하고 관할하고 있었다는 사실 증명작업 수행

□ 한·일 양국간에 쟁점이 되고 있는 논점을 정리, 이에 대한 일본의 논리 개발

○ 한국의 주장 가운데 검증이 필요한 테마를 선정하여 한국에서 제시한 사료의 근거를 고찰

○ 고대에서 근세, 근세에서 근대,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시대구분별로 검증이 필요한 테마를 선정 (<표-2> 참조)

○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기에 유리한 사실관계 규명을 목적으로 함

〈표-2〉 일본 '다케시마문제연구회'가 선정한 검토주제

시대구분	주 제
고대-근세	○ 울릉도의 귀속처가 한국인가, 일본인가를 둘러싼 논쟁 ○ 안용복이 독도를 조선령으로 하기 위해 도일했으나 안용복의 증언은 위증임 ○ 우산도가 독도라는 설
근세-근대	○ 1905년 시마네현 고시 40호로 편입되기까지의 경위 ○ 석도가 독도인가?
근대-현대	○ 국제법상 일본 영토임을 강조 ○ 평화조약에서 정한(1951년 6월 14일 개정된 영미초안) 일본이 포기하는 영토는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로 한정됨

□ 향후 조사연구 테마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 (<표-3> 참조)

○ 『조선왕조실록』에서의 우산도, 삼봉도, 가지도, 석도의 실상분석

○ 옛 오오야 가문 및 옛 무라카와 가문의 재도해 허가원 사료 검토

○ 독도관계 미해독 고문서의 해독, 해설

○ 독도관련사(史)・자료목록 작성

○ 한국에서의 독도 인식과 논점, 연구내용의 문제점

○ 독도관련 지도 조사와 해설 등

〈표-3〉 일본 '다케시마문제연구회'의 향후 연구주제

번호	주 제 명
1	『조선왕조실록』으로 고찰하는 竹島문제
2	조선 사료로 보는 안용복상(像)
3	「旧大谷家」, 「旧村川家」等의 竹島問題 재검토
4	竹島 관계 미해독 고문서의 해독과 해설
5	근세에 있어서의 죽도문제
6	근세에서 근대에 걸쳐 변경에 있던 섬들의 영유의사의 확인 과정
7	일한회담에서 「竹島」를 다룬 내용 고찰
8	한국에서 獨島(竹島)의 현상 및 문제점과 과제
9	竹島관계 繪図・地図의 조사와 해설
10	竹島관계 朝鮮地誌의 조사와 해설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일본에서의 독도연구 구심점 역할

□ 일본에서의 독도연구는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차원에서 단독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연구자간에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며, 상호협력하면서 이루어지고 있음

○ 「다케시마 관계 자료 목록」을 연구회의 홈페이지에 싣고 있는 등 연구회가

일본 독도문제 연구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음

□ 연구회가 일본 독도 연구의 싱크탱크 역할을 지향

○ 국제사법 재판소에 갈 경우 대비한 이론적 주장 개발을 궁극적 목적으로 함

○ 독도 문제에 관한 정책과 밀착된 연구수행

○ 그러나 사실상 주요한 연구·조사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있음

Ⅲ. 일본에서의 독도 문제 대응 점차 조직화·체계화

□ 시마네현 이외 돗토리현도 적극대응

○ 돗토리현에서도 독도 영토권 확립을 위한 의원연맹 발족(2006. 9)

○ 시마네현과 함께 영토문제해결 노력 및 계몽운동을 연대하여 정부에 촉구하려는 목적

○ 시마네현에 독도 문제를 전담할 부서와 인력을 설치

○ 하부행정단위인 오키군 오키노시마쵸(町)에도 독도문제 전담부서 신설

□ 일본의 정당에서도 일본 정부의 적극 대응 요구

○ 자민당 의원들은 내각부에 '다케시마문제대책실'의 설치, 내각부 설치법의 개정, '다케시마문제의 해결촉진'을 소관사항에 추가할 것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대응자세의 재검토와 대책예산의 증액을 요구함

○ 자민당 의원들은 독도 문제에 관해 시마네현의 입장과 거의 일치함

□ 전국 교사들이 학교에서 북방영토 교육을 충실히 하고자 만든 '북방영토문제교육자협회'에서 신학습지도 요령에

○ 북방영토와 함께 독도 문제, 조어도 문제를 다루는 것도 검토중에 있음

○ 또한 시마네현 교육위원회에서는 문부과학성의 학습지도 요령에 다케시마문제를 명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 중학교 교과서에서 독도 기술이 지리·공민 각 1개사 밖에 없었으나, 2006년부터 지리 2개사, 공민 3개사로 늘어났음

□ 독도 문제 관련 여론계몽, 포럼 활동

○ '영토문제 강연회'(2005. 3), '다케시마를 생각하는 포럼'(2006. 2) 등이 시마네현 공식행사로 개최, 독도의 불법점거 강연 및 일본의 독도편입 당위성 강조

○ 영토 반환의 조기 실현을 위해 가두시위 및 서명운동(마츠에시, 2005. 11, 2006. 2)

Ⅳ. 우리의 대응 과제

□ 일본은 '국익외교'를 표방하며, 2005년부터 독도, 센카쿠열도, 북방 4개 도서 등 주변국과의 도서분쟁에서 '공세적' 정책으로 전환

○ 2005년 2월에는 일본 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하여 우리의 국민적 공분을 야기한 바 있음

○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에 독도관련 기본입장을 국문, 영문, 일문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 10여년 전부터 미국국립문서보관소에 자료수집팀(5명)을 보내어 비밀해제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정리, 연구, 분석하고 있음

○ 특히, 일본은 2005년부터 약 100억 엔을 투입하여 독도, 조어도, 북방 4개 도서,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등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추진

□ 우리나라도 독도문제에 관한 국제재판에 대비하여 필요한 모든 사항을 빈틈없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 것임

○ 그러나 그 동안 독도연구는 민간 학자들의 학술적 차원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성과의 축적이 미흡

○ 대부분의 독도연구는 일본 학자들의 저술, 논문이나 외교자료 및 사료에 의존하여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학술연구가 미흡

□ 또한 정부 및 학계가 그 동안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이유로 일본의 문제제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음

○ 독도영유권에 대한 정확한 국제법적 지위와 상황파악을 통해 국내외 여론의 왜곡과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우리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논리성과 객관성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 재구성, 논리개발이 필요함

□ 따라서 독도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함

- ○ 독도문제의 국제재판에 의한 해결을 가정한 모든 시나리오 작성
- ○ 쟁점에 대한 국제법 이론, 국제판례 및 사례 분석, 시사점 도출
- ○ 국내외 역사적 자료 등 기초자료 수집, 정리
- ○ 우리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 및 논거 분석, 미비점 보안
- ○ 일본 주장의 현황, 논거, 장단점 분석 및 대응방안 마련

□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독도문제에 관한 국제법적・역사학적・지리학적인 논리개발, 체계적인 자료수집, 연구성과의 축적 등을 목적으로 “독도연구센터”를 설치

- ○ 이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기반 구축의 일환임

□ 독도종합정보관 설치 운영 필요

- ○ 일본에서 조례 제정과 연구회 설립의 가장 큰 효과가 국민 여론의 ‘계몽’과 ‘홍보’라고 자평하고 있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 역시 독도 영유권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 ○ 이를 위해 기존의 독도박물관과는 별도로 적극적인 국내외 홍보, 교육 기능을 담당하는 ‘독도종합정보관’을 설치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 독도관련 자료 공유시스템 구축 시급

- ○ 기관마다 중복 수집을 배제하기 위해 각 기관 소장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
- ○ 이를 위해 독도 자료실을 통합・운영하는 등 관련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임

【부 록】 일본 정치인들의 '독도' 인식

□ 2005년 9월 5일 산인추오신포(山陰中央新報)는 중의원선거 특집으로 "당신이 일본의 지도자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의원 후보자정책 앙케이트를 실시

○ 질문 내용 중 독도와 관련된 내용은 한일 양국간 주장이 엇갈리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그리고 시마네현과 현의회가 제정한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릴 것인가?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건을 포함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등이 있음

□ 자민당 의원 후보의 경우 시마네현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

○ 자민당 의원 후보들은 독도문제에 관한 관계부서의 합동회의에서 독도문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는데, "최종적으로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대책에 거의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

○ 한국이 국제사법재판소 부탁(付託) 건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한국에 '영토문제의 존재'를 인정하게 한 뒤 국제적인 재판 회부를 거부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山陰中央新報, 2006/05/17)는 의견을 내놓고 있음

○ 또한 자민당 의원 후보들은 "내각부에 '다케시마문제대책실'을 설치해야 한다", "내각부 설치법을 개정하여 '다케시마(독도)문제의 해결촉진'을 소관사항에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대응자세의 재검토와 대책예산의 증액을 요구(山陰中央新報, 2006/05/17)

○ 이러한 발언으로 볼 때 이들이 수적으로 우세해지고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 정부 차원의 대응책 또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자민당 의원 후보

○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후보(自民前) : 평화적 해결을 견지한다. 북방영토, 독도, 조어도 제도에 대한 정부방침은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일관하여 주장

○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후보 (自民前) : "다케시마(독도)의 영유권에 대해서는

국제법규와 관습에 기초하여 일본의 주장을 국제사회 전체에 보여줄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위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한다"고 주장

○ 다케시타 와타루(竹下亘) 후보 (自民前) :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입각해도 국제법상으로 보아도 일본 고유 영토임을 확신함." 일한 양국간에 영토문제가 있다고 하는 점을 강력히 주장해 나가면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자 함

○ 아카자와 료세이(赤澤亮正) 후보 (自民新) : "다케시마(독도)는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 중이며 국가주권에 관계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끈기 있게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함

□ 민주당 의원 후보

○ 하마구치 카즈히사(浜口和久) 후보 (民主新) : 세계에 영유권을 호소하여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 국제적으로 일본의 영토이며, 한국의 행위는 불법점거임"을 주장

○ 고무로 히사아키(小室壽明) 후보 (民主新) : "다케시마(독도) 영유권 확립은 시마네현의 비원(悲願)이지만, 국가의 외교적인 노력이 기본. 권한이 없는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은 혼란. 일한 공동의 사실(史實) 검증 및 우호와 친선을 쌓아가는 속에 상호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하여 일한 친선을 돈독히 할 것을 주장

○ 하야카와 슈우사쿠(早川周作) 후보 (民主新) :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시마네현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나, 양국 정부는 물론 양국의 국회의원 등, 정부 차원의 대화를 거듭하면서 진지하게 지혜를 모아 우호적인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함

○ 야마우치 오사무(山內功) 후보 (民主前) : "'다케시마의 날' 조례는 정부가 좀 더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동감. 법무위원회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로 제소를 요구. 이는 어업문제 등과 맞물려 대화했으면 한다"고 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요구

□ 공산당 의원 후보

○ 죠다이 요시오(上代善雄) 후보 (共産新) : "일본 공산당은 다케시마(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식민지화과정에서의 영유권 절차는 무효'라는

주장도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 서로의 주권을 존중하며, 평화우호의 정신이라는 원칙을 관철시켜 끈질기게 계속 교섭해야 한다"고 하여 평화우호로 일관하는 교섭을 주장

○ 무코세 신이치(向瀬愼一) 후보 (共産新) :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 일본영토로 생각되나, 한국측 주장에도 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음. 평화우호의 정신이라는 원칙에 의한 교섭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함

○ 쓰카타 나리유키(塚田成幸) 후보 (共産新) : "아시아 제국과의 관계 강화는 중요.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이지만,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은 대화에 의한 해결을 도외시한 것이므로 공산당의 시마네현의회 의원은 기권, 해결은 상호 주권을 존중한 끈기 있는 외교 지속 필요"

○ 스미 세츠오(鷲見節夫) 후보 (共産新) : "다케시마(독도)문제는 일찍이 양국 주민이 공동작업으로 조업했던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대화로 해결 도모" 주장

□ 사민당 후보와 기타

○ 가노오 카츠미(加納克己) 후보 (社民新):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조례는 아시아정세에 대한 인식부족. 다케시마(독도)문제의 현실적인 해결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을 얻어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고 함

○ 다나카 세이이치(田中淸一) 후보 (社民新) : "편협한 내셔날리즘에 서지 않고 대화와 협조에 의한 긴장완화를 지향하면서 북동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해 나갈 필요. 다케시마(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과거로부터의 외교경위 등을 양국간 대화를 통해 확인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 가메이 히사오키(龜井久興) 후보 (國民前) : "'다케시마의 날'을 지지하여 아시아제국과의 관계는 중요하지만, 국가로서 할말은 해야 함. 그런 의미에서 '다케시마의 날' 조례의 제정을 지지. 다케시마(독도)에 대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으로 일본 측의 지금까지의 대응은 미약했는지도 모른다"고 함

○ 가와카미 요시히로(川上義博) 후보 (無所屬前):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그리고 그 이후의 일한협정에서 일본이 애매한 태도를 계속 취해온 것이 문제"